

금투세, '시행·유예' 4년 간 논란 속 결국 '폐지' 수순

주식 5000만원 등 금융투자 이익 일정금액 초과 액수에 20~25% 세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국내 투자자 보호 취지 끊임없는 폐지 요구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지난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4년여간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로 가다가 잡혔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 특정 종목에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반면,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했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자가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명태군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북한·러시아 군사 공조 우리 안보에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군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개혁이다"고 말했다.

또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면서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개혁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공 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윤 대통령 불참·한 총리 대독

김건희 여사 특검법·명태군 통화 녹취 공개 등에 따른 상황 우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강력한 유감 뜻 표한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11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윤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김 여사 특검법, 명태군 통화 녹취 공개 등에 따른 여야 대치와 정쟁 상황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연설문 대독에 앞서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했다.

우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하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민주당 원내대표냐'는 고성만 터져 나왔고, 야당은 '조용히 하라'

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준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부권 남발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전 대놓고 국민과 싸우겠다며 구중구중을 틀어박힌 대통령의 고집불통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까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이조차 싸늘하게 외면했다"며 "이대로 윤 대통령이 오기를 부린다면 17% (지난 1일 발표된 문화일보 의뢰 엠브레 인 퍼블릭 여론조사)의 국정지지율은 바닥이 아니

라 국정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은 '여야 대치가 극심한 가운데 시정연설이 정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강변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정쟁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셔야 했다"며 "지난 국회 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만 했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